

종교교육학연구 제47권, pp.115-136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2. 28.

인권교육의 텍스트 확장을 위한 연구

- 1950년대 대중잡지 『희망』을 중심으로

조 윤 아

가톨릭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인권교육의 일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한국인권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인권사에서 1950년대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공백기로 치부되었기에, 당시 시사성과 오락성을 두루 갖추어 다수의 독자층을 확보했던 대중종합잡지 『희망』을 텍스트로 선정하여, 1950년대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텍스트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 텍스트를 통해 우선 국가 차원의 인권 관련 기사와 국민들의 인권 의식을 드러내는 기사를 각각 파악할 수 있었다. 국가 존속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는 전쟁의 당위를 설득하고 전쟁에 국민을 동원하는 데에 인권 담론을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전쟁 직후에는 국가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인권 담론을 활용하였다. 한편 국민은 인권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혹은 정부 정책을 통해 접하게 된 인권이라는 기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였기에 오해와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당시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한센인이나 혼혈아 등을 돌보았던 종교인이나 사회지도층의 실천을 통해 인권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종교교육과 인권교육이 대립하는 교육목표를 지향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으나 종교교육이 지향하는 인간 존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인권교육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진 오늘날 인권교육은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하고 교육적 자료도 더욱 다양하게 발굴되어야 한다. 『희망』 잡지와 같은 사회문화사적 텍스트는 역사적 투사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올바른 인권의식의 확립과 실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텍스트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유용한 텍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인권교육, 종교교육, 1950년대의 인권, 사회문화사적 텍스트, 월간 『희망』

I. 서론

2014년은 유엔(United Nations)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지 66주년이 되는 해였다. 각국에서 기념행사가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주관의 기념식과 시민참여 문화행사 등이 열렸다. 세계적으로 인권의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는 산재해 있다. 최근 한국 사회는 군인의 인권, 학생의 인권 등 집단조직에 속한 개인의 인권과 복지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등 사회가 직면한 인권 문제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다. 그리고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군인권법’이나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법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기도 하였다.

국가나 기타 집단조직 구성원의 자유권과 복지와 관련된 생존권(사회권)을 아울러 인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대적 개념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적 개념의 인권이란 “고전적 의미에서의 인권” 즉, “인간이 누려야 할 본연의 자유”를 의미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다 “사람이 최소한도로 생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물질적 보장”의 요구와 관련된 “생존권적 기본권”이 “가미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¹⁾ 한다. 최근에는 인간이 존엄하게 살기 위하여 정신과 육체의 주체적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을 ‘1세대 인권’, 건강권·교육권·주거권·노동권·생존권 등을 아우르는 사회권을 ‘2세대 인권’으로 보고, 이 1세대 인권과 2세대 인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인권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고 있다.²⁾

이와 같은 현대적 개념의 인권과 관련한 담론을 촉발시킨 것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이다. 30개조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인권선언을 살펴보면, 3조에서 21조까지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22조에서 27조까지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다루고 있다.³⁾ 마이클 프리먼(Michael Freeman)은 “인권법의 시작은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이다.”⁴⁾ 라고 하였으며, 역사학자 요하네스 모르싱크(Johannes Morsink)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이 “인권에 관한 온갖 의정서, 협약, 조약 혹은 선언 등의 형태로 확산되면서 국제적 지평을 심대하게 변화시켰다.”고 했다.⁵⁾ 또한 새뮤얼 모인(Samuel Moyn)은 최근 역사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이 1940년대를 인권의 도약과 성취의 중요한 시대로 보고 있는데, 그 까닭은

1) 고재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축변」, 『인권연보』(법무부, 1965), 7쪽을 이정은, 「한국에서의 인권개념 형성 과정」, 『민주주의와 인권』 제1권 2호(동아시아연구, 2001), 431쪽에서 참조.

2) 문진영, 「인권과 사회복지: 쟁점분석」, 『비관사회정책』 제39집(비관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3), 90쪽 참조.

3) 한국사전연구사에서 작성한 『21세기정치학대사전』의 ‘세계인권선언’ 관련 내용을 네이버백과사전에서 참조.

4) 마이클 프리먼, *Human Right: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김철효 옮김, 『인권 이론과 실천』(서울: 아르케, 2005), 18쪽.

5) 같은 책, 재인용.

1945년에 창설된 국제연합기구의 성격과 활동 때문이라고 하였다.⁶⁾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고, 1950년부터는 매년 유엔이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현대인권사에서 1950년대는 공백기로 치부되곤 한다. 인권의식이 국민적으로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초반 비민주적인 독재정권의 시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인권운동에서부터이기⁷⁾ 때문이다.

하지만 1950년대는 국내외에서 인권과 관련한 각종 정책과 행사가 이행되었으며, 언론·출판을 통해 빈번하게 인권 관련 글이 실렸던 시기이다. 또한 1950년대는 6·25 전쟁과 그 후유증으로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그 가운데 특히 더욱 큰 고통을 받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교단체들이 앞장섰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출판된 다양한 사회문화사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대적 개념의 인권의식이 우리나라에서 싹트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권사에서 이 시기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점, 그리고 이 시기 실제적인 인권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가 신문이나 잡지라는 점, 여기에 인권교육은 인권사 교육과 병행되어야 하며⁸⁾ 한국인권사 관련 교육용 텍스트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50년대 사회문화사적 자료를 대상으로 한국인권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한국 종교교육에서 인권교육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의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1950년대 당시 시사성과 오락성을 두루 갖추어 다수의 독자층을 확보하였던 대중종합잡지 『희망』을 텍스트로 선정하여, 1950년대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텍스트의 교육적 활용가치를 알아볼 것이다.

II. 한국 인권교육의 지형

1. 종교교육과 인권교육

21세기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자 국제적으로 이주 인구가 급증하였는데, 이로 인해 우리

6) 새뮤얼 모인, *The Last Utopia*, 공민희 옮김, 『인권이란 무엇인가』(경기: 21세기북스, 2011), 12-15 쪽.

7) 이정은, 「한국인권운동의 토대 형성: 해방 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역사비평』 통권 103호(역사문제연구소, 2013), 63-64쪽. 이정은은 관권에 의한 인권정책은 1960년대부터, 그리고 종교단체의 시민운동에 의한 인권의식의 확산은 1970년대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8) 새뮤얼 모인(Samuel Moyn)은 인류의 인권사 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역사적인 관점이 주는 유익함과 인류의 지속적인 인권의 발전에 사적 정립이 주는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뮤얼 모인, 앞의 책 참조.

나라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겪으면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그 가운데 인권 문제에 대한 의식이 크게 부각되었다.⁹⁾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 따른 인권 문제 해결에 선 도적·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종교계이다. 대표적인 움직임은 국제 이주노동자, 즉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활동으로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¹⁰⁾ 천주교외국인노동자상담소, 원불교인권위원회 등 종교계에서 설립한 단체들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는 종교계가 소외된 이웃을 향한 봉사에서 더 나아가 “이주민과 비이주민의 차별적 경계를 극복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루어가는 데까지 시각을 확장”하여야 하며 “종교교육은 이러한 사역의 관점을 공유” 하면서 “이주민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는¹¹⁾ 비전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종교교육의 역할은 “문화의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 등과 관련된 “다문화 사회의 본질적이고 심층적인 사안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¹²⁾

이렇듯 인종차별, 문화차별, 종교차별을 극복하는 인권의식은 종교교육에서 중요한 교육목표 중 하나인데, 최근 학생인권과 종립사학의 종교교육 사이에 마찰이 벌어져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자 마치 인권교육과 종교교육이 대립하는 교육목표를 지향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바람직한 종교교육, 인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¹³⁾

종교교육은 종교 간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또한 남의 인권도 침해당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권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다. 그렇다면 인권을 위한 교육은 “종교”의 차원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종교교육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교육방식의 측면에서 “인권”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¹⁴⁾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권교육과 종교교육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종립학교는 인권교육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종교

9) 전경옥, 「학교 인권교육 정책과 인권교육을 위한 대학-중학교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한국정치학회, 2007), 190쪽.

10)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은 1994년 국내에 이주해온 중국동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신교 목사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이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몽골, 아랍, 미얀마 등의 공동체를 조직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정체성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1) 오현선, 「다문화 사회와 개신교의 기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36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35쪽.

12) 김세곤, 「다문화 사회와 불교의 종교교육-유식의 관점에 의한 다문화교육의 조망」, 『종교교육학연구』 제36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2쪽.

13) 한국종교교육학회에서는 2012년 “종교교육과 인권”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어 여러 종교적 차원에서 종교교육과 인권교육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14) 손성현, 「프로테스탄트 교육은 인권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개신교 종교교육과 인권의 불화 혹은 연대의 맥락에 관한 성찰」, 『종교교육학연구』, 제39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13쪽.

교육은 다양한 종교의 역사와 교리, 종교적 공동체와 이념 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주와 생명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근원 및 삶과 죽음과 초월성 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건강한 종교인으로서의 삶과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의 확립 등 지성을 넘어서는 정신적 지향성에 관한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인간 존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인권교육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진 오늘날 인권교육은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하고 교육적 자료도 더욱 다양하게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2. 인권교육의 현실 및 연구동향

한국의 인권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며 200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져, 2010년을 전후로 해마다 20여 편 이상의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다.¹⁵⁾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는 곧 인권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며, 교육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들의 움직임이기에, 이러한 연구 동향은 한국 인권교육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 차원에서도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하여 인권에 대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하자 국가 차원에서도 인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¹⁶⁾ 그래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등 교육과정 안에 반드시 인권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주로 사회과나 도덕과 등 일부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외에 기타 학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하여서도 인권교육이 이루어진다. 인권 개념 분석, 법률과 관련한 ‘판례 학습’, 주어진 과제를 풀어나가는 ‘집단적 탐구’, 혹은 ‘모의 토의’, 인성과의 연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¹⁷⁾ “인권 내용이 개념 위주로 기술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된 예시나 사례가 부족”¹⁸⁾한 실정이다.

또한 교과를 통한 인권교육은 사회과 및 도덕과의 교과체계 맥락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권교육 자체의 고유한 맥락에 따를 수 없어 체계적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문제를¹⁹⁾ 안고 있다. 하지만 인권교육을 고유한 독립교과로 다루어야 한

15) 김민경,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인권교육 내용 분석」(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7쪽.

16) 심현주, 「세계화 시대의 갈등: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인간연구』 제10호(인간학연구소, 2006), 148-152쪽 참조.

17) 이준희, 「인권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제6, 7차 교육과정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0-61쪽. 최근에 실행된 제 8, 9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전 교육과정 연구를 참조하였다.

18) 위의 글, 63쪽.

19) 조태원, 「비제도권 인권교육 현황 분석을 통한 학교 인권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사회과 교육연구』

다는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교과목이 늘어남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독립교과가 된다면 인권은 인권담당 교사가 가르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다른 교사들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어 통합교과로²⁰⁾ 이루어질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등 비제도권에서 꾸준히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이 있다. 조태원에 의하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의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 캠프를 열거나 인권 학습지침 등을 제시하기도 하고, 각종 세미나와 문화행사를 통해 인권교육에 공헌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운동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 등은 주로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그리고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인권 회복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²¹⁾

제도권 내의 학교교육이란 결국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비제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을 더 우위에 두는 경우도 있다. 국가 중심의 인권교육 정책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가 주로 국가의 성격이나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중심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인권 존중의 범위와 해석이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²²⁾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비제도권에서의 인권교육만이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교양교육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전공별로 윤리 관련 교육이나 전공의 특성상 접근하게 되는 인권 문제가 있으므로 전공교육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양교육처럼 교육목표 자체가 인권의식의 확립에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 교양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인성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주로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필수 교양과목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존중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는다.²³⁾

수많은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접하며 살아가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권교육 관련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다양한 발굴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인권 개념, 인권의 역사, 인권침해의 이해 등등 인권교육의 세부목표에 적합한

제17권 제3호(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0), 95쪽.

20) 구본만, 「가톨릭 학교의 학생인권 개념 모형과 실천 방향 모색」, 『종교교육학연구』 제39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45-46쪽 참조.

21) 조태원, 앞의 글, 96-99쪽.

22) 전경옥, 앞의 글, 196쪽.

23) “가톨릭계 대학에서 인간존중의 정신을 교육하는 일은 교양교육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톨릭계 대학들은 학부 과정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인간의 이해 내지는 인간 존중과 관련된 교양교육을 이수하도록 커리큘럼을 짜고 있다.” 박일영, 「가톨릭과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77-78쪽 참조.

교육용 자료 발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1950년대 월간 『희망』과 인권교육

한국근현대사에서 1950년대는 전쟁의 비극으로 시작되어 언론과 출판의 여건이 극도로 열악했다.²⁴⁾ 월간 『희망』은 전시상황인 1951년 7월에 창간되어 1962년 3월까지 ‘희망사’에서 발행한 대중종합잡지이다.²⁵⁾ 『희망』 외에도 전시 상황에 출간된 잡지는 10여 종이 조금 넘는다.²⁶⁾ 학생지, 아동지, 여성지, 문예지, 대중오락지, 정론종합지 등 다양한 성격의 잡지가 발행되었는데, 이 가운데 ‘대중종합잡지’를 표방한 것은 『희망』이 유일하다. 소설가 염상섭은 『『희망』지 창간 2주년에 부치는 글』²⁷⁾에서 “대중지와 종합지의 중간”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적시하였는데, 그가 이 글에서 말하는 ‘순종합잡지’란 『사상계』나 『현대공론』 같은 정론(政論) 잡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희망』은 대중오락잡지의 오락성과 정론종합지의 시사성을 두루 갖추고자 한 잡지였다. 그리고 부통령 함태영, 의친왕의 아들 이정, 목사, 장관, 국무위원, 공무원, 군인, 평론가, 문인, 예술가, 종교인, 교수, 기자, 그리고 일반시민까지 필진의 이력은 화려했다. 이는 이 잡지가 위에서 하달되는 메시지와 아래로부터 자유롭게 분출되는 메시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매월 지속적으로 출판되는 매체의 특성상 1950대 당시 그러한 현장성을 담보하였다는 점에서 월간 『희망』은 한국인권사의 교육적 텍스트로서 적합성을 지닌다.

24)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북한군에 의하여 점령당한 서울에서는 9월 28일 서울수복까지 약 90일 동안 공산당의 『해방일보』와 『조선인민보』만 발행되었다. LG상남언론재단에서 출간한 『6·25 전쟁기간 4대 신문』 자료를 보면 『서울신문』은 1950년 10월 1일에,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10월 4일에, 『조선일보』는 10월 23일에 복간되었다.

25) 신혜수, 「1950년대 여성 관련 잡지 목록」, 『근대서지』 제7호(근대서지학회, 2013), 678-682쪽. 희망사는 임시수도 부산으로 이전하여 『희망』을 창간한 후 1953년 9월호까지 부산에서 출판하고 1953년 9월 1일에 서울로 복귀한다. 「사고(社告)」, 『희망』, 1953년 9월호, 122쪽.

26) “『신조(新潮)』(1951. 6), 『청춘』(1951. 8), 『새벗』(1952. 1), 『자유세계』(1952. 1), 『사랑의 세계』(1952. 1), 『여성계』(1952. 7), 『소년세계』(1952. 7), 『주간문학예술』(1952. 7), 『신태양』(1952. 8), 『학원』(1952. 11), 『사상계』(1953. 4), 『신시대』(1953. 5), 『문화세계』(1953. 7)” 등이 있다. 이봉범, 「1950년대 잡지 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 제30호(상허학회, 2010), 400쪽.

27) “순종합잡지나 순문예지가 순조롭게 경영되어 나가자면 불리한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닌 데에 비하여 대중지면 첫째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점이 오늘의 발전을 가져온 것이라고 하겠지마는 그러나 말과 같이 용이한 일은 아니다. (중략) 『희망』지는 소위 대중지와 종합지의 중간을 타고 나가는 듯싶이 보이거니와 이것은 시의(時宜)에 적절한 방침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요 금후로도 어느 기간 이러한 노선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염상섭, 「양득(兩得)의 특색이 있다」, 『희망』, 1953년 7월호, 17쪽.

1. 국가가 호명/배제한 인권

1) 전쟁의 당위론에 호명된 인권

한국 정부는 1950년 12월 6·25전쟁 중이었음에도 유엔이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한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였다. 1951년부터는 인권의 날을 전후로 일주일 동안을 ‘인권옹호강조주간’으로 명명하고 여러 가지 대국민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10월 24일 ‘유엔데이(국제연합창설일)’와 함께 중요한 국가 기념일이었다. 당시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으면서도 이처럼 유엔의 동향에 적극적이었던 까닭은 유엔이 남한 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원조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⁸⁾ 즉,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하나의 정책적 선택이었던 것이다.

사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전쟁이 얼마나 극심한 인권유린의 현장인지를 목도한 후 인권존중의 필요성을 세계 각국이 절실히 공감하여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내놓은 것이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철수 요청’을 결의하고 곧바로 유엔군의 한국전 참전을 결의한 것은 ‘전쟁을 위한 전쟁’ 혹은 이기는 전쟁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종식을 위한 대응이었다. 그래서 6·25전쟁 첫 해인 1950년부터 꾸준히 종전 관련 논의를 하였다. 1950년 12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영국의 애틀리 수상이 워싱턴에서 회동하여 평화적 종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 12월 14일 유엔총회에서 3개국 협상단 구성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유엔이 전쟁을 종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동안에 한국 정부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지정한 인권의 날에 “세계제패의 야망을 가진” “공산주의 세력의 한국 침입을 분쇄하고 공산주의의 인권유린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²⁹⁾ 이 날을 기념한다고 공표하였다. 그리고 『희망』에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글이 실렸다. 흥사단의 국내 조직이었던 수양동우회 일원이자 월간 『희망』의 주요 집필진으로 꾸준히 기고하고 있는 원달호는 휴전협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1953년 1월 「인간고(人間苦)의 초점(焦點)」이라는 글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금일의 우리 한국은 악질의 공산주의로 인하여 역사에 없는 비참과 파멸을 당하고 있으니 이것

28) “안전보장이사회는 1949년 10월 22일자 총회 결의가 대한민국 정부는 합법적으로 수립된 정부로서 한국인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하여 실제적인 지배력과 주권을 보유한다는 것과, (중략) 이 정부는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정부임을 단정한 것을 상기하고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공격을 중대 관심사로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 행위는 평화의 파괴를 구성하는 것으로 1. 분쟁시 정시 정지를 요구하며, 북한당국에 대하여 그 군대를 38선까지 철퇴할 것을 요구한다. 2. (생략) 3. 전회원은 이 결의의 실시에 있어서 유엔에 모든 원조를 부여하며 북한당국에 대하여는 원조를 행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1950년 6월 25일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문」, 김삼웅 편저, 『자료로 보는 20세기 한국사』(서울: 가람기획, 1997), 213-214쪽.

29) 『조선일보』, 1950년. 12월 11일.

이 곧 사람이 가진 희망인가.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난 결과인가. 참으로 우리 한국인은 공산주의에 대하여 구적(仇敵)이요 악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곧 우리 한국인은 우리의 희망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제일선에서나 후방에서나 멸공성전(滅共聖戰)을 이루고져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는 처지에 있는 만큼 한껏 먹고 입고 술만 마시고 잠만 자는 것으로 우리의 희망을 다 이룬다는 천박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옳고 참된 생각이라고 한다.³⁰⁾

현 시점에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은 공산주의이며, 따라서 6·25전쟁은 ‘멸공성전(滅共聖戰)’, 즉 공산주의를 섬멸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고, 이를 위해 온 국민이 희생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희생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쟁을 치르는 만 1년 반 동안 피난 속에서 구호물자로 근근하면서 궁핍해질 대로 궁핍해진 국민의 생활고는 돌아볼 생각도 없이, 생활고의 해결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조차 ‘천박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국가우선담론을 강하게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담론에는 평화적 종전을 지향하는 유엔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쟁에 싸워 이기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유엔으로부터 촉발된 ‘인권’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유엔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지지하는 데에 이 ‘인권’이라는 기호를 사용한 것이다. 휴전협정에 대한 유엔의 논의가 진척될 때마다 국내 언론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급기야 1951년 6월 10일에는 임시 수도 부산에서 ‘휴전반대국민대회’가 일어났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후에는 통일을 위해 북진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³¹⁾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학술서나 연구서, 교과서 등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될 경우 필자에 따른 가치관이 반영된 진술로 전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우선담론이나 안보우선담론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언급된다면 국가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진술될 확률이 높다. 인권 개념은 “국가의 억압정도와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보 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³²⁾ 있어 “개인이 국가나 다른 외부 억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³³⁾주는 것이 인권교육의 목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권교육이 무조건적인 반국가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것은 ‘개인의 이기적인 권리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만약 위의 『희망』지 텍스트를 직접 학생들에게 제시한다면 필자의 견해가 반영된 논저를 학생들에게 제공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1950년대 한국사와 한국현대인권사에 대한 지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보다 더

30) 원달호, 「인간고(人間苦)의 초점」, 『희망』, 1953년 1월호, 24쪽.

31) 평화신문사 논설위원 이한용은 미군사령관으로 부임한 텔러 장군에게 띄우는 편지 형식의 글 「우리는 통일을 염원-텔러 장군에게 드리는 공한(公翰)」을 『희망』지 1954년 1월호에 실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참정에 있으면서도 공산적도들을 격멸하기 위하여 철석같은 결속 아래 매진하고” 있다면서 북진을 간곡히 부탁하기도 한다.

32) 이정은, 앞의 글, 133쪽.

33) 전경옥, 앞의 글, 192쪽.

중요한 것은 인권과 관련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논의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과 국민의 인권이 대치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 존속의 위기 상황이라면 국민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이 정책입안자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자신이 사회지도층이라면 국민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어떤 맥락에서 인권이라는 용어가 쓰였는가?’, ‘인권의 도구화에 대한 개인의 견해는?’ 등등 다양하고 다각적인 안건을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국가 재건에 호명/배제된 인권

다음으로는 안보우선담론이 아니라 경제우선담론을 내세우며 인권을 등한시 한 경우이다. 국방위 민의원이었던 임흥순은 무엇보다 민생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며 따라서 경제 재건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민주정치 중 물론 언론의 자유도 있을 것이요, 소유권에 대한 보장도 있을 것이요, 인권 옹호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요, 노동자의 집단보장 등등도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문제라고 생각한다. (중략)

문란된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아무리 가혹한 처벌의 법률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생활이 극도로 빈한하면 법의 질서라는 것도 그리 오래 유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경제재건에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그러므로 해서 경제의 건전성(健全性)과 국민의 생활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³⁴⁾

임흥순은 민주정치가 현재 우리나라의 과제임을 밝히면서 그 민주정치도 근원은 경제에 있다고 단언한다. “헌정(憲政) 6년 동안” 늘어난 것은 “결인, 사창, 아사자, 실업자, 강도 등 사회의 이단(異端)된 죄인”³⁵⁾뿐이며, 이처럼 생활이 극도로 빈한한 자들이 늘어나면 법으로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재건’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결인’, ‘아사자’, ‘실업자’ 등을 ‘이단된 죄인’으로 전제한 것이나, ‘인권’ 이외의 것으로 지목한 항목들을 보면 임흥순은 아직 인권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소유권’, ‘노동자의 집단보장’ 등도 세계인권선언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이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제19조, 재산 소유권과 관련된 제17조, 집회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20조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제23조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극도로 빈한’한 ‘민생’ 역시 제25조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권으로서 제시되어 있다. 1950년대는 시기적으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고 인권교육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인권개념이 올바르게 정립되기란 힘들었을 것이다.

34) 임흥순, 「민생문제와 정치-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는 어떻게」, 『희망』, 1954년 1월호, 38-40쪽.

35) 같은 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사회질서’를 위해 경제재건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생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국민의 인권보다는 국가를 우위에 둔 가치관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경제재건을 국가의 우선 과제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궁극의 목적이 국민 개개인의 윤택한 삶, 국민의 인간 존엄의 삶에 있지 않고 ‘사회질서 확립’에 있다면 이를 위해 ‘인권’을 배제하거나 보류해도 좋은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방위 민의원 임홍순의 글이 실린 지 1년 후에 사회부장관 박술음이 「전재(戰災) 미망인에게 보내는 서한서」라는 글을 씁는데, 이 글에서도 ‘사회질서’와 ‘인권’이 함께 언급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르다. “피난 전에 살던 자기 집에도 환도하여 들리면 때로는 고소를 해야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 싸움판이다. 그러기에 지도층 인사들부터 인권옹호를 부르짖고 있지 않는가!”³⁶⁾라고 하여 당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인권옹호’가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인권옹호강조주간에 정부가 제시한 구호가 “너도나도 귀한인권 서로서로 존중하자.”³⁷⁾이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정부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호명한 인권은 ‘나의 인권’이라기보다는 ‘타인의 인권’이다. 물론 인권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개인의 이기적인 권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와 사회전체를 향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³⁸⁾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위해 때로는 인권을 보류하자고 하고 때로는 인권을 옹호하자고 하는 국가적 담론이다.

이와 같은 국가 담론은 오늘날 어느 나라에서나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온고지신해야 할 것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과거의 국가 담론을 교육 현장에서 텍스트로 접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면, 현재의 국가 담론을 마주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것인지 분석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국가의 정책적인 담론은 명쾌하게 혹은 알기 쉽게 그 의도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당연히, 반국가주의를 위해 이와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인권교육에 있어서 ‘인권’을 호명하는 다양한 담론들을 직접 텍스트로 접하도록 하여 그 의도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국민의 인권 의식

1) 인권 의식의 혼란

앞에서 국방위 민의원 임홍순이 인권의 개념을 제대로 확립하고 있지 못했다는 지적을

36) 박술음, 「겨울이 오면 봄도 머지 않으리! -전재(戰災) 미망인에게 보내는 서한」, 『희망』, 1955년 3월 호, 52-54쪽. 큰 딸의 동창이자 제자이기도 한 35세 미망인에게 쓴 서간문이다.

37) 1956년 인권옹호강조주간의 구호이다.

38) 전경옥, 앞의 글, 192쪽.

하였다.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오도하고 있는 경향은 검사 오제도의 글 「배후에서 본 인권옹호」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가 사례로 들고 있는 예를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인권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것은 6·25 동란 전에 있던 사건이었다.

이곳에서 학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모대학교에 적을 둔 여학생이 무려 25명이라는 남성을 상대로 한 치정사건이 발각되었다.

이때 그 여학생에게 학생으로서의 지나친 소행이라든가 여성으로서의 불성실에 가까운 도의적인 부당성을 지적하자 그는 “내 몸을 갖고 내 자유로이 행동하는데 무슨 간섭이냐.”는 뜻의 말을 하였다. 이렇게 되고 보면 그에게 이 이상 그 어떤 것을 추궁하든 인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 여학생은 25명의 남성 중에서 두 남성에게 성병을 옮겼던 것이다. 그래서 내 몸을 갖고 내가 자유로이 행동한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인권이라면 그가 그의 몸을 통해서 타인에게 성병을 옮겼다는 것은 또한 인권의 침해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던 것이다.³⁹⁾

위의 글은 웃지 못할 믿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다. 『희망』지에 검사로서 진지하게 우리 사회에 인권과 관련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주고자 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여대생의 ‘치정사건’이라는 다소 흥미위주의 일화가 들어 있다. 여대생이 주장하는 인권의 자유나 검사가 주장하는 인권 침해, 둘 다 적절하지 않은 주장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여대생이 보여준 자유권에 대한 오해는 예나 지금이나 흔히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한편 실제로 인권 침해는 인권 개념의 무지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의 무지로부터 발생하기도 하였다. 당시 『희망』지에는 농민이나 상의군인, 환자 등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계층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기사를 싣기도 하였는데, 특히 한센인에 대한 기사가 주목을 끈다.

『희망』지는 1954년 3월호에 “몸부림치는 천형의 죄인들!”, “해부! 「문둥이」들의 실태와 생활” 등 자극적인 타이틀로 「특별조사」 기사를 싣는다. 그러면서도 “방방곡곡을 헤매며 울부짖는 사만오천 명의 죄 없는 수인들!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베풀 적인 있었는가!”라며 관심을 촉구한다. 그런데 기사의 의도는 관심을 가지고 한센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954년 현재 총 환자의 수가 4만 5천에 이르며 그 가운데 국립요양소에 있는 환자는 28,55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환자는 부랑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전하면서 국립요양소에 그들을 격리할 방도를 찾자고 종용한다.⁴⁰⁾

39) 오제도, 「배후에서 본 인권옹호」, 『희망』, 1955년 3월호, 85쪽.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격리시켜 외부인과의 접촉을 절대적으로 엄금해야 되는 것을 제반 재정의 빈곤으로 말미암아 서로 얼버무려 생활하게 되니 병자는 점차 늘어갈 수밖에—.

나병자(癩病者)가 만지던 돈을 신사나 숙녀가 다루고 그들이 매달리던 대문의 고비나 문지방을 어린 소년이나 부인들이 축수하게 됨으로써 균이 전염되어 하루 이틀 지나는 동안 병의 발생은 바로 옆에서도 목격하게 된다.⁴¹⁾

당시에는 위의 기사와 같이 한센병을 불치의 전염병, 그것도 그들의 몸에 닿은 물건을 접촉하기만 해도 균이 옮는 병이라는 잘못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한센인의 인권은 무시되었다. 인권의식이 부족했던 시기 특히 인권 보장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바로 한센인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실질적으로 사회로의 참여가 배제된 상황에서 한센인들이 접근 가능한 거의 유일한 외부로의 통로 혹은 관계는 교회”였다.⁴²⁾ 배타적이며 제한적으로 인권을 부여하는 잘못된 인권 의식이 팽배하였던 시기, 천부인권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센인을 도운 것은 종교인이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부터 천주교에서는 성 라자로마을(1948년), 산청 성심원(1959) 등 한센인 요양 시설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한센인들을 보살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 구라회’의 이동 진료(1957)를 통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센인을 치료하였다. 이러한 이동 진료 활동은 꾸준히 실행되어 “강제 격리 수용적 한센병 정책에서 재가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⁴³⁾

『희망』 텍스트는 인권이라는 용어가 일반 시민들의 입을 통해 회자되기 시작한 1950년대 대에 인권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인권 의식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잘 보여준다. 이에 반해 실천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종교인들의 움직임을 역사적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인권교육은 인권이라는 용어 사용의 빈번함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평등함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의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며, 이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적

40) 김태운, 「해부! 「문둥이」들의 실태와 생활」, 『희망』, 1954년 3월호, 118-119쪽. 1955년 2월호에 다시 등장한 한센인 환자 관련 기사는 소록도 방문기이다. 「책보는 ‘인테리」, 「죽음을 넘은 ‘로맨스」 등과 같은 소제목을 붙이고 기사를 씌으로써 한센인을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로 다룬다. 그리고 1955년 5월호부터 1957년 1월호까지 21개월 동안 한센병 시인 한하운의 자전적 이야기 「나의 슬픈 반생기(半生記)」를 연재한다. 이 글은 1957년 10월 단행본 『고고한 생명: 나의 슬픈 반생기』로 출판된 후 중등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동안에도 “악질 문둥이의 마수에서 아이를 지킬 것”(『희망』, 1956년 7월호)을 중용하는 기사가 실려, 당시 『희망』지에서 한하운 시인의 글은 의식개혁을 위한 글이라기보다 대중잡지의 흥밋거리로 게재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41) 위의 글, 120쪽.

42) 주윤정, 「해방 후 한센인 관련 사회사업-천주교계의 활동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29집(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222쪽.

43) 위의 글, 240쪽. 1963년 ‘나병환자 격리 규정’이 폐기되어 법적인 격리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으나, 이후에도 한센인들은 소록도로 강제송환을 당했다.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2) 낯선 사회적 약자, 혼혈아

휴전 이후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삶을 회복시키는 데에 특히 어려움을 겪은 것은 고아들이었다. 사회적·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아동들이 가족을 잃거나 부모로부터 버려지면서 길인으로 혹은 소년법으로 추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당시 보건사회부 집계에 의하면 전쟁 이후에도 기아(棄兒)의 수는 1955년 715명, 1956년 1425명, 1957년 2506명 등으로 급속히 늘어⁴⁴⁾ 『희망』지에는 〈기아술(棄兒術)〉이라는 풍자만화가 등장할 정도였다. 「만신창이로 종막 되는 인권주간」이라는 기사에서는 휴전된 지 3년이 지난 후에도 ‘영아유기’와 ‘소년동사’가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⁴⁵⁾

전쟁 이후에 버려지는 영아들은 전쟁 기간 중 혹은 그 이후에 임신 출산한 경우로, 이 가운데에는 ‘혼혈아’⁴⁶⁾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혼혈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자 “이승만 정권은 1954년부터 혼혈아를 ‘아버지의 나라’에 보내기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혼혈 고아들은 먼저 미국으로의 입양이 추진”되었다.⁴⁷⁾ 혼혈인이 증가한 것은 8·15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 주둔한 미군과 한국전쟁기에 참전한 유엔군, 즉 외국군인과 한국여성 사이에 출생한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⁴⁸⁾

『희망』지는 전쟁고아보다 혼혈아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편이다. 오락성을 띠는 대중지이기도 한 만큼 흥미를 유발시키는 윤락여성에 대한 기사, 문란한 여성 연예인에 대한 기사 등이 많은데, 그러한 맥락에 이른바 ‘UN공주’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혼혈아를 언급할 때에 어김없이 동반되는 ‘UN공주’의 사연이 그것을 말해준다. ‘UN공주’에 대한 견해는 크게 비난과 동정의 시선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중적 시선이 『희망』지에도 공존하고 있다.

(…)산과노릇을 싫증이 나도록 해온 나도 새로 탄생한 그 아이를 보고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몸뚱아리가 빨강도깨비를 연상시킬 정도로 새빨간 살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44) 이정은, 「한국전쟁 이후 ‘인권보호대상자’를 둘러싼 담론 형성의 매카니즘」, 『사회와 역사』 제86집(한국사회사학회, 2010), 128-129쪽.

45) “소년동사도 이번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금동에 잡아들여서만도 벌써 몇 번 거듭되고 있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가 말 아닌 만큼 간과한다면 그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소위 인권옹호강조주간에 발생한 것이고 본즉, 특히 우리로서는 무신경하게 넘길 수만 없다.” 「만신창이로 종막 되는 인권주간」, 『경향신문』, 1956년 12월 16일.

46) ‘혼혈’이라는 단어가 혈통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대체할 용어가 마땅히 없는 실정이어서 그대로 사용한다.

47) 이정은, 앞의 글, 130쪽.

48) 김아람, 「1950년대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해외 입양」, 『역사문제연구』 제22호(역사문제연구소, 2009), 36쪽.

때, 나의 「센스」에서랄까, 문득 혼혈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인은 백인과 흑인이지만 아직 빨간 사람은 못보았습니다. (중략) 매일 한 번씩 그 집에 가서 영아의 목욕을 시키는데, 어떤 일입니까. 홍당무 같았던 그 살빛이 날이 갈수록 검푸르게 변하지 않습니까.⁴⁹⁾

위의 글은 기자가 산파를 직접 만나서 들은 사연을 전하는 ‘르포’ 형식의 기사이다. 산파는 혼혈아 출생을 도왔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산모가 ‘양공주’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그녀가 평양 사람이며 해방 후 가족과 함께 월남하였으나 담배장사로 생계를 책임지던 아버지가 불구자가 되면서 부모를 위해 양공주가 된 사연을 전한다. 이것은 ‘양공주’에 대한 동정적 시선이다.

김아람은 「1950년대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해외 입양」 연구에서 혼혈인과 ‘양공주’가 ‘국민’에서 ‘배제’되고 ‘소탕’의 대상이 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으나,⁵⁰⁾ 『희망』지를 보면 반드시 그러했던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박준섭 기자는 「유엔부인과 혼혈아」라는 기사에서 외국군인과 ‘유엔부인’ 간에 출생한 혼혈아가 1951년 조사된 수가 356명인데, 그 가운데 50%는 고의로 유기되고 있으며, 5%만 생부가 호적에 올랐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대부분이 생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실태를 전하면서 구습에서 벗어나 인종차별을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다.

결국 혼혈아 대부분은 요권호대상(要權護對象)으로 전락하기 쉬운 현실에 처하여 있다. 이런 견지에서 사회부에서는 혼혈아 처우문제를 일대(一大) 사회문제로 간파하고 기처우(其處遇)와 교육 방침 등을 각관계부면(各關係部面)에 통첩하여 일반국민아동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중략) 우리겨레의 단일적 민족성은 역사적으로 한 자랑꺼리지만 이때야말로 과거 오랜 인습에 구속되거나 유색무색(有色無色)의 인종차별을 지양하고 일치단결하여 대국민적 아량을 보일 때라고 생각된다.⁵¹⁾

혼혈아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며, 무엇보다 ‘일반국민아동’과 평등하게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단일민족’이라는 전통적인 자긍심을 가지는 국민 정서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아량’으로 혼혈아를 차별하지 말자고 권하는 부분도 인상적이다. 이 ‘단일민족’에 대한 자긍심은 세계화시대 다문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오늘날 다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안건이기도 하다.

『경향신문』의 정치부장인 박운대 역시 「희망특별논단-혼혈아들은 어디로 가는가?」에서 ‘천부인권’을 언급하면서 혼혈아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한다.

49) 안병길, 「산파가 본 세정(世情)」, 『희망』, 1955년 5월호, 220쪽.

50) 김아람, 앞의 글, 34-44쪽 참조.

51) 박준섭, 「유엔부인과 혼혈아」, 『희망』, 1953년 7월호, 88쪽.

(…) 초보적인 윤리관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현대사회에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생이나 서자가 인간으로서 차별을 해야 한다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회질서의 미풍을 해하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 죄는 사생이나 서자를 탄생케 한 그 부모에 있을 것이지, 천부의 인권을 가지는 그 자식에게는 하등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⁵²⁾

혼혈아를 사생이나 서자와 비교하면서 그들이 출생하는 과정에 발생한 부모의 비윤리적인 행위와는 구분하여 ‘그 자식’은 차별 없이 ‘천부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양공주에 대한 동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 중에 부정적인 시선을 고려한 주장이다.

혼혈인에 대한 연구 논저들의 경우 정부정책 자료나 통계와 관련된 기관 자료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이로 인해 앞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연구결과와 국민 정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과거 일반 국민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는 대중잡지와 같이 일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연구 논저뿐만 아니라 잡지와 같은 사회문화사적 사료를 직접 텍스트로 활용해야 온전한 당대의 시대 의식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인권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인 1950년대 한국인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1950년대 대중종합잡지 『희망』을 대상으로 하여 당시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텍스트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다루어진 텍스트 관련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50년대 당시 국가는 국가 존속의 위기 상황에서 전쟁의 당위를 설득하고 전쟁에 국민을 동원하는 데에 인권 담론을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전쟁 직후에는 국가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인권 담론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국가우선담론이나 안보우선담론, 경제우선담론이 담겨 있는 텍스트는 여타 필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그의 견해를 이해하거나 비판하는 정도의 교육에 그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직접 텍스트를 접함으로써 여러 이해가 얹혀 있는 복잡한 상황에 역사적 투사로 접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하고 다각적인 안전들을 연계하여 수준 높은 논의를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역사적 교육을 통해 오늘날 인권을 호명하는 다양한 담론들에 대한 분석력과 판단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지향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월간 『희망』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찾을 수 있다.

52) 박운대, 「혼혈아들은 어디로 가는가?」, 『희망』, 1954년 3월호, 82쪽.

한편 1950년대 당시 국민은 인권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혹은 정부 정책을 통해 접하게 된 인권이라는 기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였기에 오해와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나 한센인이나 혼혈아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았던 종교인이나 사회지도층의 실천을 통해 인권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인권교육은 인권이라는 용어 사용의 빈번함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평등함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의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에 대한 이해를 과거 우리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사회문화사적 자료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 텍스트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종교교육과 인권교육이 대립하는 교육목표를 지향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으나, 종교교육이 지향하는 인간 존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인권교육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진 오늘날 인권교육은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고 교육적 자료도 더욱 다양하게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월간 『희망』, 서울&부산: 희망사, 1952년 6월호~1956년 12월호.

2. 논저

강명숙, 「인권교육 연구 동향-최근 5년의 국내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5권 3호(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2).

구본만, 「가톨릭 학교의 학생인권 개념 모형과 실천 방향 모색」, 『종교교육학연구』 제39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길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02.

김민경,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인권교육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삼웅 편저, 『사료로 보는 20세기 한국사』, 서울: 가람기획, 1997.

김세균, 「다문화 사회와 불교의 종교교육-유식의 관점에 의한 다문화교육의 조망」, 『종교교육학연구』 제36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김아람, 「1950년대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해외 입양」, 『역사문제연구』 제22호(역사문제연구소, 2009).

문진영, 「인권과 사회복지: 쟁점분석」, 『비판사회정책』 제39집(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3).

박일영, 「가톨릭과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손성현, 「프로테스탄트 교육은 인권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개신교 종교 교육과 인권의 불화 혹은 연대의 맥락에 관한 성찰」, 『종교교육학연구』 제39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신혜수, 「1950년대 여성관련 잡지 목록」, 『근대서지』 제7호(근대서지학회, 2013).

심현주, 「세계화 시대의 갈등: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인간연구』 제10호(인간학연구소, 2006).

오현선, 「다문화 사회와 개신교의 기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36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30호(상허학회, 2010).

이정은, 「한국에서의 인권개념 형성 과정」, 『민주주의와 인권』 제1권 2호(동아시아연구, 2001).

이정은, 「한국인권운동의 토대 형성: 해방 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역사비평』 103호(역사문제연구소, 2013).

이정은, 「한국전쟁 이후 ‘인권보호대상자’를 둘러싼 담론 형성의 매카니즘」, 『사회와 역사』 제86집(한국사회사학회, 2010).

이준희, 「인권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제6, 7차 교육과정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전경옥. 「학교 인권교육 정책과 인권교육을 위한 대학-중학교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한국정치학회. 2007).
- 조태원. 「비제도권 인권교육 현황 분석을 통한 학교 인권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사회과교육연구』 제17권 제3호(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0).
- 조태훈. 「논단: 인권의 개념」. 『민족연구』 제45집(한국민족연구원. 2011).
- 주윤정. 「해방 후 한센인 관련 사회사업-천주교계의 활동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제29집(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 최현. 『인권』. 서울: 책세상. 2008.
- Kim, Jane S. H., “Leprosy and Citizenship in Korea under American Occupation”, 『사학연구』 100호(한국사학회. 2010).
- Michael Freeman. *Human Right: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김철효 옮김. 『인권 이론과 실천』. 서울: 아르케. 2005.
- Samuel Moyn. *The Last Utopia*. 공민희 옮김. 『인권이란 무엇인가』. 경기: 21세기북스. 2011.

원고접수일: 2015년 1월 22일 심사일: 2015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23일

연구자소개: 조윤아

① 전공: 국문학 / 소속: 가톨릭대학교 ELP학부대학

② 관심영역: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③ 주요논저: 「박경리 〈토지〉의 생명사상적 변모에 관한 연구」, 「가해자를 통해 드러나는 도덕의 딜레마 -박경리의 〈창〉을 중심으로」, 『박경리 문학세계 -운명으로부터의 자유』

④ E-mail: juvena2@hanmail.net

Abstract

A Study for Text Expans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 Focusing on *Hope*, a Popular Magazine in the 1950's

Cho, Yuna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new contents that can be used for education about the Korean history of human rights having its significance as part of human rights education. Particularly, even though the 1950's was a crucial era in terms of the Korean history of human rights but has been neglected as a gap for nothing, this study selected *Hope*, one of the popular magazines of the time, as its text and examined the situ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1950's and its educational value as well.

First, with the text, it was possible to find out articles about human rights from the national dimension and also those showing the people's awareness about human rights. In the circumstances that put the country into crisis, the government aggressively used human rights discourse to persuade the people about the necessity of the war and also mobilize them for it. Also, right after the war, it employed human rights discourse to establish national order. Meanwhile, the people experience misunderstanding or mistake as they arbitrarily interpret and apply the sign of human rights that they were exposed through government policy or the press without receiving any education on human right. But, awareness of human rights could be confirmed through practice of leading people of the society or men of religion who had taken care of children of mixed blood or people with Hansen's disease placed in the most vulnerable conditions in 1950's.

While it causes misunderstanding that religious education and rights on human right pursue educational goals confronting to each other, practice and understanding on human dignity pursued by religious education is not different from the goal of educ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on human right should be expanded more nowadays when the cheapening of human life is a widespread trend, and educational data should be discovered more diversely. Socio-cultural text like a magazine *Hope* not only makes us

experience historical projection but also is a text that can lead in-depth discussion on practice and establishment of proper human right in the complicated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 Accordingly, it can serve a text useful in the field of education.

Key words: Human Right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Human Rights in the 1950's,
The text of socio-cultural history, The monthly magazine Hope